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전노조입니다.

가슴이 울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치거나 전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현실이 됩니다.

2010년 정부는 공기업 임금 삭감을 목표로 공기업 선진화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신입사원 초임을 30% 삭감'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을 반토막 내기 위해서 '연봉제' 도입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과 노동조합들을 불법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복수노조제도 시행과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회사는 발전노조 파괴와 더불어 회사가 주도하는 '회사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는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발전노조에서 조합원을 탈퇴시켰고, 회사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결코 포기

할 수 없었고, 동지를 배신할 수 없었기에, 1,300여명의 노동자들이 끝까지 발전노조를 사수해 왔습니다. 인천화력지부와 발전교육원 지부는 그 폭압의 가운데서도 발전노조가 다수노조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으며, 드디어 2014년 4월 40개 발전소 중 가장 큰 보령화력에서는 발전노조가 다수노조를 탈환하였습니다. 지금도 '정의'를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열망과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써 발전노동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권리를 올바르게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발전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의 위임장'을 써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내가 가입하는 노동조합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근로자 과반(간부 포함 전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거기에 힘을 보태어 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나의 월급은 사장이 주지만, 나의 월급의 형태와 조건은 근로자의 대표, 즉 노동조합의

위원장 동의 없이는 바꿀 수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회유도 누구의 압박으로도 나의 노동조건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노조인 발전노조만이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시대의 어용노조들이 겉으로는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우리의 생존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하기도 하며, 노조 선거에도 개입합니다. 회사노

조의 주인은 회사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민주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당장의 불이익을 이겨내는 용기가 더 큰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나만 승진하고, 나만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본인에게도 불이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

선이라는 생각 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한다는 가슴으로 살아야 합니다. 멀리보고 길게 보는 지혜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근로자? 도대체 뭐가 맞나요?

'노동자'는 그야말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그 옛날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노동자라고 표현하기 싫은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국내 유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노동3권이라는 것이 있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동부라는 것이 있지만 근로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자? 월급쟁이? 아닙니다. '임금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이 뭐예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그 속에서 시책말로 '총대매줄' 사람을 뽑아서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 등 활동을 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진정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같은 서민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진정한 노동조합입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이 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없다면 회사는 만들어 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필요충분조건이며, 회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은 회사가 존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존재입니다.

성공? 아니 행복! 하세요. ^^

월급쟁이들의 성공이란 존경받는 지위에 오르는 것, 승진하는 것을 말하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 위치에 걸 맞는 존경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을 다하여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말단 직원이라도 당당하고 신념있고, 자주적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대학가야지...승진해야지...시험잘봐야지...취업해야지!!!!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행복'하라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

"발전노조"

당당히 민주노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연혁

2001년

- 04. 02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력·원자력 1개사와 화력발전 5개사 분리
- 05. 29 전력노조 제56년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원자력노조와 발전5개사 단일 노조로 분할 결의
- 07. 19 초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이호동)
- 07. 24 5개 발전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설립
- 08. 14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입

2002년

- 02. 08 발전소 매각반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 및 조정신청 결의
- 02. 25 민영화 반대 파업선언(쟁의행위 돌입)
- 04. 03 위원장 파업 중단(조합원 복귀 명령) 후 현장투쟁으로 전환
- 11. 남동발전 우선매각 대상 발표에 따른 실사저지 투쟁 전개

2003년

- 03. 28 남동발전 매각 중단 정부 발표
- 05. 규약개정 찬반투표 (임기단축 3년 → 2년)

2004년

- 03. 09 제2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신중승)
- 07. 2004 임단협 합의 (해고자 5명 복직 외)

2005년

- 09. 2005년 단체교섭 합의 (해고자 4명 복직 외)

2006년

- 03. 14 제3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이준상)
- 09. 04 발전 5개사 통합 요구 1일 파업

2007년

- 11. 15 2007년 임금협약 체결

2008년

- 03. 11 제4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박노균)
- 12. 26 2008년 임금협약 체결

2009년

- 03~05 정원감축/ 초임삭감 이사회 저지투쟁(본사)
- 11. 노조간부 지명파업
- 11. 06 필수유지 1차 전면파업 및 야간문화제
- 11. 18 영흥화력지부 지명파업

2010년

- 03. 11 제5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박중옥)
- 09. 28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지부장 지명파업

2011년

- 03. 17 단체협약 체결 12. 21 2011년 임금협약 체결

2012년

- 02. 10 규약개정(안) 찬반투표 가결(94.7%)
- 02. 29 제6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신현규)
- 10. 성과연봉제 반대! 발전설비 외주화 저지를 위한 투쟁

2014년

- 03. 12 제7대 집행부 선거(위원장 신현규)



▲ 2002년 파업 집결 모습(서울대)



▲ 2003년 남동발전 매각에 맞서 실사단이 발전소에 못들어오게 막고 있는 모습(분당화력)



▲ 현장운전원 징계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 선전전 모습(2012년, 인천화력) / 인천지부는 탄압속에서도 발전노조가 과반수 넘는 대표노조이다.



▲ 졸속적이고 부당한 6차전력수급계획공청회에서 발전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2013년, 한전강당)

기업별(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노조의 탄생과 민주노조파괴

- 정권과 회사는 민주노조인 발전노조를 이렇게 파괴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10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사회

제20906호 경향신문

“발전노조 해체, 청와대가 감독하고 총리실·경찰이 집행”

“노사관계 선진화” 이영호 주재 회의서 기획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의 노조 파괴 과정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경찰이 직접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 ‘감독’에 따라 정부 부처와 발전 자회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노조 해체 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MB정부의 발전노조 탄압은 정권 차원의 기획과 지원하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업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산하 공공기업의 강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다.

2009년 9월17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주재의 노사관계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주역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비서관 주재로 총리실·노동부·행정안전부·지경부 국장이 참석해 발전노조·공무원노조·가스·MBC노조·전교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회의 후 발전노조 탄압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2010년 11월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40.8%의 찬성률로 부결되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획’이란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민주노총 탈퇴 총회가 부결돼 합리적 노조 설립(회사노조)에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해 왔다”며 “2010년 12월 중 반민주노총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예정”이라고 돼 있다. 또 동서발전의 노

지경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9.17)

○ 국무총리실 차장(박영준)
- 해동기에서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

○ RH 고용노사 비서관(이영호)
-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발전은 계획만

조 탄압에 대한 ‘VIP(대통령) 격

로 지속적인 노력 및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실제 동서발전은 2010년 지경부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뒤 지난 9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민주노총 탈퇴가 부결되자 동서발전은 회사에 협력적인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당시 법적으로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자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압력을 넣을 계획을 짜다.

회사 측이 만든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노조 설립(Plan B)’ 보

고서에는 “노동조합 설립필증 조기 수령을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통한 압력 행사. 2010.11.30. 김○○ 접촉 예정”이라고 돼 있다.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접촉키로 한 ‘김○○’은 확인 결과 경찰청 정보과 형사였다.

동서발전 노조파괴에 경찰이 적극 개입한 것은 동서발전 노동담당 간부가 경찰청 정보과에 보낸 이메일에서 드러났다. 동서발전 박모 노동자장은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되자 경찰청 정보과 박모 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종합시다. 투표를 가결시켰어야 했는데...”라며 기업별노조 추진 계획을 담은 ‘플랜B’ 추진일정

을 보냈다.

박 차장은 또 지경부에 수시로 ‘노조 관련 선진화 추진실적’ ‘동서발전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노조에서 밝힌 첨부파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청와대의 지시로 2010년 2월 발전노조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노총 탈퇴 노획”을 자회사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은 채 노조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탈퇴 후보의 득표율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배치한 뒤 지부장 선거에서 탈퇴 후보가 출마한 본부에서 가점을 줬다. 이 결과 발전노조 조합원 81%가 민주노총을 탈퇴해 6500명이던 조합원은 1300명으로 줄었다. 현재 발전 자회사 5곳 모두 기업별노조가 설립돼 활동 중이다. 이명경 기자

sanemind@kyunghyang.com



동서기업별노조 탄생! 회사노조의 시작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음모

2011, 2012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동서의 이길구 전 사장은 첫 번째 시도로, 발전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1년도 경영평가 자료에는 ‘합리적 노동조합’ 설립 운운하기도 하며 그 속내를 공식화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탈퇴를 사전 준비하기 위하여 초간고시 개악과 근무평정제도를 개악하였다. 또한 인사이동 등 모든 불이익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들을 협박하였다.

결국 2년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이길구 사장’은 노동탄압과 ‘연봉제 도입 2중 합의서’, 국회 위증혐의 등의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였으며, 거짓으로 받은 공공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 상 또한 취소되는 수모를 겪었다.

동서회사의 발전노조 민주노총 탈퇴 노력과 개입 : 2008년
→ 민주노총 탈퇴 실패

동서발전 민주노총 탈퇴 공약 지부장 당선 개입 : 2010년3월

반 민주노총 성향 노동조합 설립 신고 예정 (동서회사 문건) : 2010년12월

동서 기업별 노조 추진위 소속 지부장 발전노조 탈퇴 (2010년12월)

회사의 개입과 강압속에 동서 기업별 노조 설립 및 세력 확장 : 무법의 동서발전

서부, 남부, 중부, 남동 차례로 기업별 노조 설립 (간부들에게 지시하여 불법적인 발전노조 탈퇴 작업 실시)

4개사기업별노조! 회사의 불법적 개입과 강요로 조합원 모집과 설립

동서 기업별노조 이후 나머지 4개사도 경영평가와 사장자리 보전 등의 미명아래 모든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탄압하여 발전노조를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로의 가입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의식불명 되는 조합원이 나올 정도로 그 탄압의 강도

는 엄청난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한 집행부의 대부분이 발전노조 전, 현직 지부장들이었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투쟁하라고 뽑은 당시 선출직 지부장들의 대부분이 기업별노조 설립이라는 회사의 유혹과 강압에 굴복한 것이다.

발전노조 조합비 소송 승소! 2012.9

4개 기업별 노조와 회사는 발전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발전노조가 ‘조합비’를 부당하게 거출 하였다면서 탈퇴한 조합원들과 간부들에게 강요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그런 과정에서 발전노조의 조합비는 상당기간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

은 판결을 통해 조합비를 거출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조합비를 정산하고자 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며 발전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소송이었나를 반증한다.

민주노조 사수와 발전노조 재건! 1300여명의 조합원

현재 1300여 명의 발전노조 조합원이 모든 불이익과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노조를 굳건히 사수하고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탄압을 이겨내고 발전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손가락 잘려나가는 것이 두려워, 팔뚝 잘리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 모든 발전노동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02년 38일의 발전파업 이후 발전노조는 이와 유사한 일을 겪었다. 파업이후 대부분의 지부장들은 회사와 정권에 백기를 들었으나, 이후 조직은 재건되고 10년에 걸친 발전민영화 반대투쟁을 성공시키고 남동발전 우선 매각을 막아내었다. 발전노조는 발전노동자 현장의 동지들이 다시금 이 모든 탄압과 암울함을 떨치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발전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현규입니다.

신입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약칭 발전노조)은 소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현재 발전회사는 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라는 이름으로 5개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원래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는 2001. 4. 1.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6개 회사(한수원 + 5개 화력발전회사)로 분할하였습니다. 비록 다섯 개의 회사로 나누어졌지만, 화력발전 소속 노동자들은 큰 단결로 생존권과 전력산업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2001. 7. 발전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별 노조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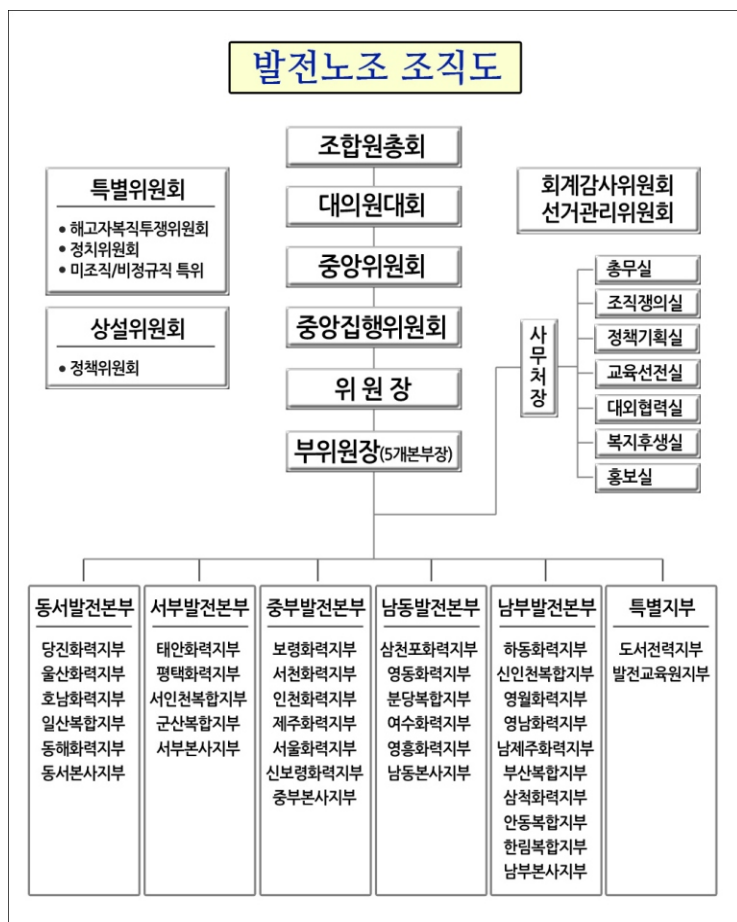
전력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필수공공재이기에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발전노조는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전으로의 재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2002. 2. 25부터 38일간 진행된 파업을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과 해고의 아픔이 있었지만, 선배들은 이를 훌륭하게 극복했고, 이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침내 2004년 정부로부터 발전소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곳의 발전소도 팔리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는 신규 민간발전소 확대를 통해 우회적인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

습니다. 발전노조는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주목하고, 국민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는 정부와 회사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이명박 정권은 2009년부터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온갖 불법 부당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발전회사 사장들이 앞다투어 어용조합간부들을 내세워 회사별로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와 사주받은 조합간부들은 조합원들이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노조에 가입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였고, 많은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발전노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300여명(2014. 4. 15. 기준) 가량의 노동자들이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입후배 여러분!

회사와 손잡고 만들어지고 회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뜻이 아닌 회사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5사는 이름만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이 똑같기에, 기업별 5개사 울타리를 뛰어넘는 발전산업노조로 크게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기업별로 뿔뿔이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전노조 깃발아래 함께 당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발전현장에서 만남을 고대하겠습니다.



발전노조 제 7대 집행부

(임기: 2014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위원장 신현규(제주화력)

010-5285-0993 / shg6721@empas.com

사무처장 조준성(삼천포화력)

010-9030-0275 / jjs3000@empas.com

부위원장

서부본부장 임승주(태안화력)

010-2909-1918 / seobu00@empas.com

남부본부장 최용우(영남화력)

010-8836-9582 / cywoocyywooo@hanmail.net

중부본부장 김준석(인천화력)

010-4042-5089 / ephraim0617@gmail.com

동서본부장 장기성(호남화력)

010-4548-4916 / jangkis66@hanmail.net

남동본부장 박정규(영흥화력)

010-4440-8321 / p5212p@hanmail.net

정책기획실장 하태경(인천화력) / 조직쟁의실장 이종술(하동화력)

대외협력실장 윤유식(울산화력) / 총무실장 이병철(동해화력)